

밀양 화재 참사, 원인은?

방화문 열려 인명피해 커졌다

유독가스 확산 순식간, 질식사 가능성 높아 거동 불편한 환자 많아 대피 제때 못한 듯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큰 인명피해가 나오게 된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경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망자는 41명, 부상자는 130여명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대피를 제 때 하지 못한 측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빠르게 대피를 하기 힘든데다 유독가스가 빠른 시간에 번져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불이 난 세종병원에는 모두 100명의 입원 환자가 있었고 바로 뒤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에도 9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후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체대피가 쉽지 않은 노인 환자의 비중이 높아서라는 분석이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이다보니 일반 피난 자와는 다르게 대피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던 것 같다"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유독가스를 흡입하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주 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

수도 "병원의 특성 상 운동능력이 나 신체능력이 일반인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는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없으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큰 이유"라고 밝혔다.

불이 나면 하늘이 보이는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스스로 걷기가 힘든 환자들에게는 보조자가 있어야 쉽지 않은 일이다.

이창우 송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환자들은 자력 피난이 어려워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평 피난을 해야 한다"며 "현대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이 아니면 이런 개념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질식사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주 교수는 "이번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화재로 10명이 사망하면 이 중 7~8명은 연기질식에 의해 사망한다"며 "사인이 화상 때문이라도 연기를 마셔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열에 노출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했다.

방화문이 열려있었던 점도 유독가스가 삼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지난 26일 오전 7시 32분경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나가는 데 일조를 했을 것인 분석도 나온다.

이창우 교수는 "방화문이 닫혀있어야 연기가 멈추는데 병원은 유동 인구가 많다보니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불편해 한다"며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가 있지만 돈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째도 둘째도 안전교육이다. 안전의식이 높은 사회는 규제 법이 약한데 (우리 사회는) 낮기 때문에 법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건물을 지을 때 (안전을 위해)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 역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피해가 더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소방법이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기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오래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속수무

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 교수는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 더 열악한데도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며 "안전과 경제적 문제를 놓고 경제적인 것을 더 중시하다보니 안전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소급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주 교수는 "건물이 이미 지어진 상태인데 법이 바뀌어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현행법 수준에 맞춰 유지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부담이라는 입장"이라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현행법 기준을 따르게 돼 있지만 모든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다보니 현행법에 맞춰 소방시설을 갖추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상하수도 요금 인상 철회하라”

정읍시 13~60% 3년간 인상 장학수 도의원, 입장 밝혀 서민생활·경제 타격 심각 전년도 요금 동결 촉구



준인데 반하여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은 매년 13%~60%씩 3년간 인상하고 있다"며, "불경기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국민의당, 정읍·사진)은 지난 1월 10일 제349회 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수도요금에 전국에서 가장 비싸고 시·군간 요금편차가 너무 크다"며 전라북도의 수도행정 개선을 촉구하며 요금이 가장 비싼 곳으로 정읍시를 지목하였다.

이후 정읍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수도요금 전국에서 가장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장 의원은 지난 26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읍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정읍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수도 '평균요금'은 2018년 현재자료가 아닌 2016년 자료라 현실성이 없으며, 산업·공업용을 포함한 모든 용도의 공급량과 요금을 합산하여 나눈 것으로 주민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요금수치"라며 주민들이 납부하는 요금고지서만큼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는냐며 이는 정읍시가 2년 전 자료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읍시의 발표를 반박하였다.

장 의원은 주민들이 알기 쉽게 도내 14개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2018년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군중 정읍시가 가정용, 영업용, 육탕용 상하수도요금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수도요금은 타 시군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비싸 가장 저렴한 장수군보다 1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부 요금인상은 부득이하겠지만 정읍시의 경우 3년간 가정용기준 수도요금 50% 인상과 하수도요금 309% 인상은 너무 심하다며 매년 전국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 수

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각종 소비자 물가 또한 같이 인상할 수밖에 없어 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결국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게 되면 지역생권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결국 상인들과 지역주민은 먹고 살기위해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 상태에 빠지게 되어 급격한 인구유출로 정읍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행안부가 수도요금을 원가대비 소비자 가격을 현실화 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이는 행안부가 농산어촌과 소도시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정으로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하여 면적대비 인구비를 저조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상하수도 원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도요금을 소도시 주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킨다면 부하는 요금고지서만큼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는냐며 이는 정읍시에서 살지 말고 모두 대도시로 이사 가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정읍시가 수도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상하수도요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무조건 지역주민에게 요금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정읍시의 불필요한 낭비예산을 절감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상하수도요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2만 정읍시민을 대신하여 정읍시가 정읍시의 회와 함께 조례개정을 통해 2018년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철회하고 2017년 요금으로 동결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정음=김태환 기자

청년창업농 농촌정착 성공 돕는다

전북도, 이달 말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접수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2018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

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이다. 독립경영 1년차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이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은 30일까지 농립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

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구비서류는 영농(창농) 계획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의 거래증명자료(출하,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등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창업 용자금과 영농 컨설팅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적 농촌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